

제주 트램 도입 이번엔 실현 가능할까

도, 트램 도입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한국철도기술원 선정... 내년 9월까지 용역 진행 교통체계 연계·적정 차량시스템 등 가능성 검토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역은 철도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며, 5억원을 들여 내년 9월 1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트램 도입 타당성이 있는

노선을 검토·분석해 노선 대안별 사업 추진 가능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기술개발 현황·계획을 고려한 적정 차량시스템(수소 등)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을 고려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미 운영 중인 대중교통수단과의 중복노선 조정 방향, 사업의 추진방식 및 예비타당성 면제사

업 추진 시 대응 방안, 자금 조달 방안 등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 수립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이번 용역은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적 첫 단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앞서 수행되는 사전 타당성 용역인 만큼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과 향후 각종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논리 개발, 기초분석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트램 계획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제4차 대중교통계획 등에 반영됐으며,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전 타

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거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 "도민 중심의 노선 발굴과 청정 대중교통수단 도입을 전제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초고령화 가속

서귀포인구 14.5% 점유... 매년 2500~3340명 늘어 복지문제·일자리 창출·사회 참여 등 정책변화 시급

서귀포시의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 인구 비중이 14.5%를 차지하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세하며 이에 따른 노인 복지과 일자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제5기(2023~26)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귀포지역의 베이비부머 1세대(58~66세) 인구는 2만5591명이다. 지난해 2566명이 노인인구로 유입됐고, 올해도 2683명이 노인인구로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매년 2700~3340여명씩 보태지며 노인 인구는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서귀포시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중위 연령은 2023년 47.8세에서 2035년 54.0세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노령화지수도 2023년 167.4명에서 2035년 309.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노년 부담비는 2023년 30.3에서 2035년 51.0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늘어선 고령화 심화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 참여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문화여가공간 조성,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최근 베이비부머의 노인 세대 진입과 맞물려 중장년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기관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여가 기반 조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실현 등 4개 전략·40개 세부과제를 선정

했다. 백낙기기자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 운영 제주시, 2억원 투입해 제거

제주시는 덩굴류가 왕성하게 자라는 9~11월을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으로 정해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작업 규모와 예산이 4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주요 도로변 덩굴류가 크게 늘면서 도로 경관을 해치고 가로수 등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침엽수로 대표되는 덩굴류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만이 아니라 생활권 녹지까지 급격히 확산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제거 기간에는 일주동·서로, 애조로, 아연로 등 주요 도로 13개 노선 72ha를 대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일주동로 22.3ha, 일주서로 20.8ha, 아연로 6.8ha, 애조로 5.09ha 등이다. 다만 제주시는 "최대 덩굴류의 경우 단기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등을 활용해 도로변, 산책로 등 150ha에 대한 덩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전선희기자



왜가리의 사냥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습지에서 왜가리가 드렁허리 한마리를 사냥에 성공한 후 맛있는 만찬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의견수렴 착수

내년 1월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자치도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부금 보

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같은 법 시행령(2022.9.13.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 규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답례품 선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5월에는 답례품 선정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제주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고대리기자

어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서귀포시, 13억 규모... 11월 지급 계획

서귀포시가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를 신청한 어가에 대해 자격 및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 어가를 선정해 오는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 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0월 중으로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조건불리지역

의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1차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 내 1580여가가 신청한 상태다.

이에 시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13억원이며 개인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80만원수준이다. 이중 20%(16만원)는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과 어업 활성화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622어가에 직불금 12억1650만원을 지급했다. 백낙기기자 haru@ihalla.com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도민(비정규직)을 위한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 활동 지원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제주지역노동교육상담소는 한국노총 소속 변호사 및 노무사와 공동으로 제주도민과 제주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각종 생활법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구조 상담활동을 2007년부터 매년 전개하여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와도 공동으로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부당한 대우나 처우, 억울한 일, 말 못할 고민 등에 대해 생활법률, 노동법률 상담 및 자문과 취업·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민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 및 취업·심리상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9월 26일(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 1) 내 용 : 제주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취업·심리 상담활동 (변호사1, 노무사2, 취업상담사1, 심리상담사1 등)
- 2)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오전10시 ~ 오후 3시까지
- 3) 장 소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 4) 대 상 : 제주도민 누구나

